

정책과제 2008-05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 :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 공혜영(세종대 무용학 박사)

서 문

우리나라는 예술진흥을 위한 국가 지원의 역사가 오랜 편이다. 1972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공식화된 예술지원정책은 프로젝트 베이스의 창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예술인의 사회보장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4대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체계에 포섭되지 못한 예술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 근로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술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의 타개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예술인부터 우선적으로 4대보험 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단기적으로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와는 별도 구조로서 또는 그것을 보완하는 체계의 일환으로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국정과제인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기능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하나의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문화예술인공제회가 설립되기까지는 관련 법의 제정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그러한 제 과정의 첫 출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향후 여기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후속 연구 및 정책 추진으로 연결되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송 재 호

연구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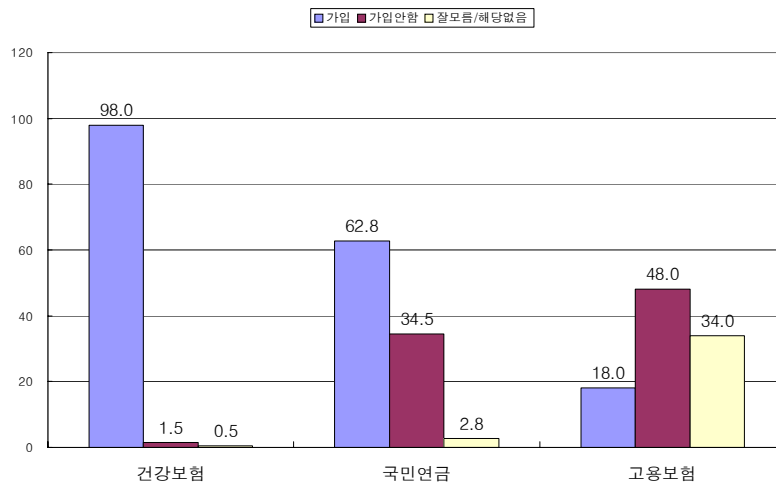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새정부에서는 다수의 예술인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 설립 필요성의 검토, 공제회 가입 대상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본 구상, 그리고 구체적인 공제회 설립 준비 과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문화예술인 복지실태와 유사 공제회 사례 분석

가. 예술인 생활 및 복지 실태

- 다수의 예술인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 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2006년도 조사에서 전체 예술인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의 정규 고용직 비율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수의 예술인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의 9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전체의 62.8%, 고용보험은 18.0%만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정갑영,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58쪽.

[그림 1]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나. 유사 공제회 사례 분석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2002년 제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 형태의 공적 공제회로서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공적 재원의 출연과 회원 납부금을 재정기반으로 과학기술인연금 사업(퇴직급여 공제사업), 적립형 공제사업, 기타 복지·후생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8,134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95개의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급여공제사업 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이 비정규·단속적 노동이라는 점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유사한 점이 많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예능인연금제도’는 예술인의 자발적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한 공제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본의 ‘예능인연금제도’의 운영 사례는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3.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기본구상

가. 공제회 설립의 기본 방향

- 공제(共濟, Mutual Aid)는 사전적으로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제회(共濟會, Mutual Aid Association)란 일반적으로 구성원 상호간의 생활 부조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결사체를 의미함.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Korea Artist Mutual Aid Association)는 문화예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로서, 문화예술인의 생활 보조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 목적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인 상호부조 및 공공부조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추구함.
 -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모든 문화예술인이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하는 데 기여함.
 -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의 개선과 창작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

나. 공제회 가입 범위와 기준

1) 가입 대상 범위

- ‘문화예술인공제회’에서 ‘문화예술인’의 개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제회 가입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

- ‘문화예술’의 개념 범위는 명료하지 않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의 장르로 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과 좁은 의미의 ‘예술’, 또는 매우 넓은 의미의 ‘문화’의 개념 범위를 고려하여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가입 대상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가형) 문화예술진흥법상 12개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연구기관 등 문화기관과 게임산업·콘텐츠산업·신문사·방송사 등 문화산업체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 (나형)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개념을 적용하여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및 출판 등의 12개 분야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 (다형)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개념 가운데 좁은 의미의 예술로 분류하기 어려운 어문 및 출판을 제외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및 연예 등 10개 분야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 (라형) 문화예술진흥법상 10개의 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산업적 성격이 강한 영화와 연예를 제외한 8개 분야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 공제회 사업 규모를 위해서는 대상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적 재원을 통한 수혜 구조나 직업적 동질성 확보를 고려할 때는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그 대상 범위가 넓은 가형이나 나형의 ‘문화예술인공제회’보다는 그 대상 범위가 좁은 다형이나 라형의 ‘예술인공제회’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표 1> 가입 대상에 따른 공제회 유형

유형	해당 분야						성격	비고
가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출판	문화기관, 문화산업체			문화예술인 공제회	
나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출판				문화예술인 공제회	문예진흥법 제2조
다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예술인 공제회	
라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예술인 공제회	

2) 가입자격 및 기준

- 문화예술인공제회와 관련, 가입 자격이 있는 예술인의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나 전개한 적이 있는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적 예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① 멤버십을 통한 정의 : ‘문화예술인공제회’ 가입 당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공공예술기관이나 민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단체나 협회 소속 예술인의 경우 기관이나 협회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회원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을 입증하는 방식(임의 단체로 조직되어 운영 중인 예술인 단체는 제외).
- ② 예술적 산출물에 의한 정의 : ‘문화예술인공제회’ 가입 전 3년 동안의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하는 방식(세부적인 활동기준에 대해서는 장르별로 작성).
- ③ 소득을 통한 정의 : ‘문화예술인공제회’ 가입 전 3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직업적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방식.

- ④ 자격심사위원회에 의한 정의 : ‘문화예술인공제회’에 회원 가입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인공제회에 가입 신청을 한 예술인에 대해 심의하여 자격을 인준하도록 함.

다. 공제회의 주요 사업

1) 노후연금 관련 공제사업

- 현재 문화예술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는 다음 네 가지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

- (A) 특수직역연금 수혜자 그룹(교수/교사/공무원) : 특수직역연금 + 퇴직금(연금) + 개인연금
(B) 국민연금 수혜자 그룹1(급여를 받는 정규예술인) : 국민연금(직장) + 퇴직금(연금) + 개인연금
(C) 국민연금 수혜자 그룹2(자영예술인 중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지역) + 개인연금
(D) 무연금 그룹(자영예술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 : 국민연금 미가입 + 개인연금

- 문화예술인공제회에서 별도의 ‘연금상품’을 개발, 운영하면, (D) 그룹의 수는 최소화되고, 최소한 (C)그룹 정도의 연금수혜계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적금 형태의 연금 상품을 개발하여 가칭 ‘문화예술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 공제’를 모델로 하되 ‘문화예술인연금’의 급여 지급 시 공적 재원에 의한 ‘장려금’ 지급이 부가된다면 공제회 회원에게는 최상의 연금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그 외 공제사업

- 상해 관련 공제사업 : 타 공제회 등의 사업을 참조하여 개발하되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개발(상해시 입원비, 요양비,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실시 등)

- 취업 및 재교육 지원 사업 : 자영예술인의 경우 현행 고용보험체계(실업급여, 재교육 등)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 예술인에 적합한 형태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보험 체계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도록 함.
- 생활자금 대여 서비스 사업 : 예술인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제 사업을 개발(교육비, 주택 구입비 및 임차료, 경조사비 등에 대한 금융지원)
- 여가·문화복지 서비스 사업 : 휴양 지원 프로그램(휴양 및 관광지에 있는 호텔, 콘도, 펜션 이용에 가격 할인, 무료 이용 등 편의 제공), 문화생활, 여가생활 지원 프로그램(문화예술인에 맞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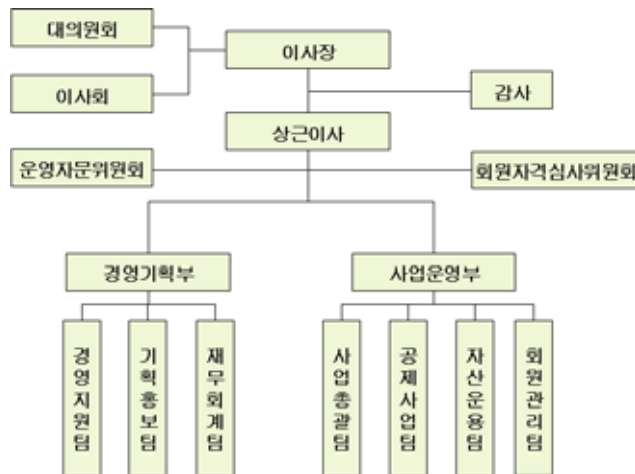
라. 재원 조달 방안 및 부담금 납부 방법

- 공제회는 자주적인 조직이므로 기본적으로 회원의 부담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소득 발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자영예술가의 경우, 일시 납부 또는 선택적 분할 납부 등 부담금 납부 방식 다변화가 요구됨.
 - 개런티나 저작권료, 작품료 등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각예술의 경우 작품으로 대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공제회의 조직 구조와 법적 지위

1) 공제회 조직구조

- 공제회의 조직은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와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모든 의사결정은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하되 공제회의 대표성은 이사장에 있고, 실질적인 업무 총괄은 상임 이사가 담당하도록 함.
 - 운영자문위원회와 별도로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그림 2] 문화예술인공제회 조직 구성도

2) 공제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

- 공제회의 법적 지위는 법률적 설치 근거를 갖는 특별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가칭 ‘문화 예술인공제회법’ 제정을 통한 특별법인 설립 방안을 제안함.

4.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계획

가. 주요 추진 과제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 제정이라 할 수 있음.
 - 법의 제정은 문화예술인공제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뿐만 아니라 공적 재원의 조달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입법과정과 병행하여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엇보다 연금상품을 비롯한 상품 개발(설계)이 잘 이루어져야 함.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성패는 그 핵심 주체인 문화예술인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공제회 설립의 제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더불어 공제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 작업을 병행해야 함.

나. 추진 일정(안)

- 문화예술인공제회는 국정과제로서의 채택되는 과정을 통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부분 이루었다는 전제하에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 추진 일정(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음.

<표 2>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 일정(안)

연도	주요 과제	내용
2008년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기초연구의 후속연구로 문화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문화예술인공제회 운영 방안 연구	기초연구의 후속연구로 공제회의 법적 지위 재정 추계 등 분석 연구
	문화예술인공제회 관련 전문가 세미나	문화예술인의 공제회 설립에 대한 인식 환기 및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연도	주요 과제	내용
2009년	문화예술인공제회법 제정	문화예술계 여론 수렴(공청회),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법률 제정
2010년	문화예술인공제회설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 제정 후 3월 이내에 구성하여 설립 준비 작업 추진
	문화예술인공제회 창립총회 및 법인 등록	공제회 창립후 회원 가입 및 자원 조달 방안 마련
	주요 공제상품의 개발 설계	문화예술인공제회설립위원회 및 공제회 사무국 주관하에 구체적 상품 개발설계 추진
2011년	‘문화예술인연금’(적립형 공제) 사업 시작	문화예술인공제회 대표적인 공제사업으로 추진
2012년 이후	추가적인 사업 개발 및 회원 가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생활금융 서비스, 상해 및 재해에 대한 지원, 문화·여가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공제 사업을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

5. 결론

- 이번 연구 결과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를 특별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음.
- 가입 대상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장르에서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관련 스태프(행정, 경영, 기술 스태프)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적 예술인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 그 대상 범위로 보아 공제회의 명칭도 가칭 ‘예술인공제회’가 적절할 것으로 제안함.

목 차

서 문

연구개요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6
제2장 예술인 복지실태와 유사공제회 사례 분석	7
제1절 예술인 생활 및 복지 실태	9
1. 예술인의 소득수준	9
2. 예술인의 직업실태	11
3. 예술인의 복지실태	14
제2절 유사 공제회 사례 분석	16
1. 과학기술인공제회	17
2. 건설근로자공제회	26
3. 일본 예능인연금제도	36
4.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1
제3장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기본구상	45
제1절 공제회 설립의 기본 방향	47
1. 공제회의 개념과 설립 목적	47
2. 공제회 설립의 기본 방향	48

제2절 공제회 가입 범위와 기준	49
1. 가입 범위 및 예술인 규모	49
2. 가입자격 및 기준	56
제3절 공제회의 주요 사업	61
1. 노후연금 관련 공제사업	61
2. 상해 관련 공제사업	67
3. 취업 및 재교육 지원 사업	67
4. 생활자금 대여 서비스 사업	68
5. 여가·문화복지 서비스 사업	68
제4절 재원 조달 방안 및 부담금 납부 방법	71
제5절 공제회의 조직 구조와 법적 지위	74
1. 공제회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74
2. 공제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	76
제4장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계획	79
제1절 추진 과제 및 계획	81
1. 주요 추진 과제	81
2. 추진 일정(안)	84
제2절 후속연구의 추진	85
1.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실시	86
2. 문화예술인공제회 운영방안 연구	88
제5장 결 론	89
참고문헌	92
Abstract	95
부록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안)	97

표 차례

〈표 1-1〉 전문가 심층 인터뷰 현황	6
〈표 2-1〉 예술인의 교육직 종사비율 추이	13
〈표 2-2〉 예술인의 교육직종별 종사비율	13
〈표 2-3〉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및 부담금 현황	19
〈표 2-4〉 과학기술인연금 급여지급 유형	21
〈표 2-5〉 과학기술인연금과 일반퇴직금의 세제 혜택 비교	22
〈표 2-6〉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와 일반적금상품의 세제 혜택 비교	23
〈표 2-7〉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의 지급 유형	24
〈표 2-8〉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여사업 개요	24
〈표 2-9〉 건설기술공제회 퇴직공제금 청구사유 및 증명서류	34
〈표 2-10〉 일본 예능인연금 구좌별 가입기간 및 급여지급액 기준표	40
〈표 3-1〉 가입 대상에 따른 공제회 유형	51
〈표 3-2〉 한국센서스에 의한 문화예술인 규모	52
〈표 3-3〉 직업지도에 나타난 문화예술인 직업인구 현황	53
〈표 3-4〉 직업지도에 나타난 예술인 직업인구 현황	54
〈표 3-5〉 예술계 대학/전문대학 학과 및 졸업생 현황	55
〈표 3-6〉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와 타 연금상품 비교	63
〈표 3-7〉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와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액 비교	64
〈표 3-8〉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와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비교	64
〈표 3-9〉 유사공제회 관련 법에서 정부보조금 관련 조항	71
〈표 4-1〉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 일정(안)	84
〈표 4-2〉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조사내용	87

그림 차례

[그림 2-1] 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수입 규모 추이(2000~2006)	9
[그림 2-2] 예술인 월평균 수입 규모 추이(2000~2006)	10
[그림 2-3] 예술인 가구 월평균 수입 규모 추이(2000~2006)	11
[그림 2-4] 예술인의 취업 형태	12
[그림 2-5]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14
[그림 2-6] 전문무용수의 사회보험 가입률	15
[그림 2-7] 시각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16
[그림 2-8]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직도	18
[그림 2-9] 3층으로 구성된 노후보장체계	20
[그림 2-10] 과학기술인연금의 부담금 비율 및 급여 구조	21
[그림 2-11]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도	27
[그림 2-12]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사업장 현황	28
[그림 2-13]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수납 현황	28
[그림 2-14]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근로자) 현황	29
 [그림 3-1] 문화예술인공제회 조직 구성도	74

제 1 장 서 론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다수의 예술인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 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2006년도 조사에서 전체 예술인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수치는 2000년 65.4%, 2003년 68.9%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절반 이상의 예술인이 예술 활동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줌.
- 또한 예술인의 정규 고용직 비율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수의 예술인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임.
 - 다수 예술인의 고용지위가 자유업 또는 자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와 관련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었음.

공약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통한 창작기반 조성
정부지원과 예술인 상호 간 자조적 형태가 결합된 '문화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회비는 예술인이 납부하고, 기본 재원은 정부 또는 공적 기금으로부터 마련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기반 조성

- ‘문화예술인공제회’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 진전이 미약하고, 또 실제의 설립 및 운영까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단기 연구과제로 이 기초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음.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 이 연구에서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 필요성 검토, 설립을 가정했을 경우 공제회 가입 대상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본 구상, 그리고 구체적인 공제회 설립 준비 과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즉,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정책 환경의 분석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설립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제회 설립방안 설계를 비롯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주요 내용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인 실태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것이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

- 현재 문화예술인들은 직업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명료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명확하지 않아서 기존 사회보장제도로의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복리 증진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설명
-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다른 사회 계층과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계 내부의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공적 지원이 결합된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합의도출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기본구상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기본 성격 및 방향, 주요 사업, 재원조달 방안, 가입대상의 범위와 기준 등을 검토하여 공제회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 계획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의 제정,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등 공제회 설립 및 운영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한 후, 이를 하나의 추진 일정으로 제시함.
- 기초연구의 후속연구로서 ‘문화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와 ‘문화예술인공제회 운영방안 연구’ 등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제시함.

나. 보고서의 구성

- 이 보고서의 구성은 먼저 제2장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 및 유사 공제회 사례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정리하였음.

- 부록 자료로는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유사 공제회 사례 분석은 문헌 연구를 기본적 방법으로 사용함.
- 전문가 인터뷰 : 제3장과 제4장의 문화예술인공제회 기본구상 및 추진 계획은 예술계 종사자 및 복지 및 보험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음.
- 인터뷰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1-1> 전문가 심층 인터뷰 현황

회차	인터뷰 대상 전문가	인터뷰 일자
1	송창근(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연극인지부 사무국장)	2008년 4월 4일(금)
2	윤성주(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2008년 4월 8일(화)
3	박신의(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2008년 4월 8일(화)
4	김석진(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2008년 4월 10일(목)
5	나호열(한국예총 기획위원)	2008년 4월 10일(목)
6	박한재(과학기술인공제회 기획팀장)	2008년 4월 14일(월)
7	채승훈(수원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16일(수)
8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	2008년 4월 16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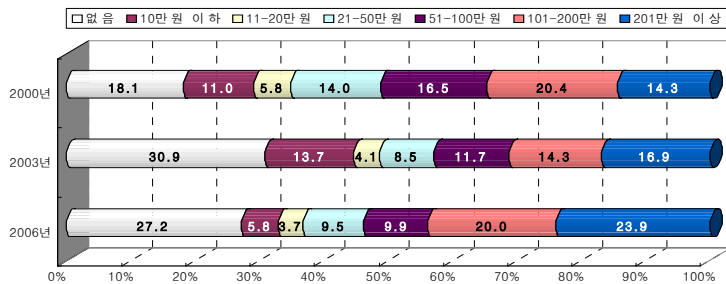
제 2 장 예술인 복지실태와 유사공제회 사례 분석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절 예술인 생활 및 복지 실태¹⁾

1. 예술인의 소득수준

- 다수의 예술인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열악한 생활 환경에 처해 있음.
- 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2006년도 조사에서 전체 예술인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수치는 2000년 65.4%, 2003년 68.9%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절반 이상의 예술인이 예술 활동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줌.
- 최근 6년간의 추이를 보면 예술활동 수입이 월 2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전혀 없다는 예술인의 비율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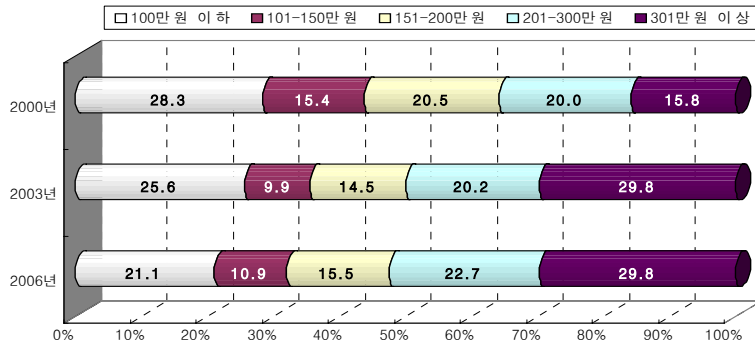


*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0~2006)에서 재구성.

[그림 2-1] 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수입 규모 추이(2000~2006)

- 1) 이 절에서는 문화예술인 가운데 예술인을 중심으로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 및 복지 실태를 정리하였음.

- 예술 활동 이외의 수입까지 포함하여 예술인 개인 수입 총액을 보면,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2003년 25.6%에서 2006년에는 21.1%로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예술인의 소득 상황은 나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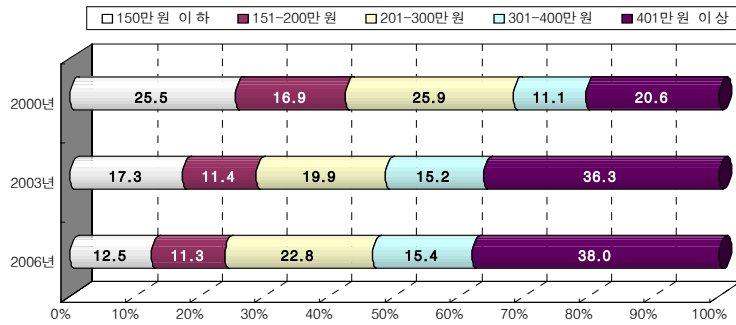
*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0~2006)에서 재구성.

[그림 2-2] 예술인 월평균 수입 규모 추이(2000~2006)

- 예술인 개인의 수입 관련 추이를 보면 100만원 이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200만원 이상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만원 이상의 예술인 비율이 2000년에 35.8%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50.0%로 늘어난 이후 2006년에도 52.5%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런데 예술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3년 6.3%에서 2006년에는 5.3%(무응답 제외한 경우)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크게 보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이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 또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술인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대상

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50만원 이하가 11.7%에 지나지 않은 반면, 300만원 이상은 50.0%로 높게 나타남.



*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0~2006)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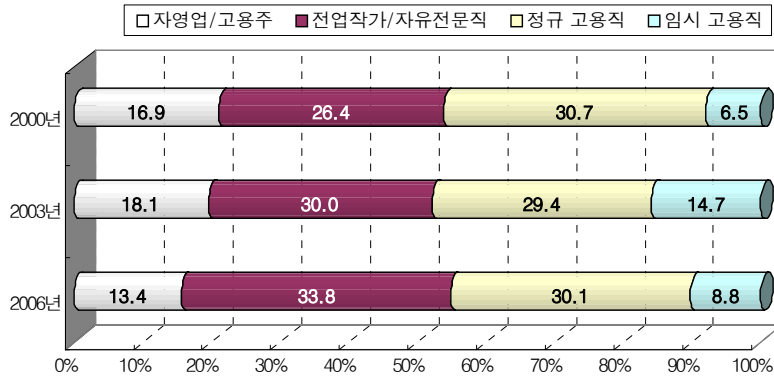
[그림 2-3] 예술인 가구 월평균 수입 규모 추이(2000~2006)

- 또한 2000년부터 볼 때 100만원 이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300만원 이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예술인이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나 개인 수입은 높지 않은 반면, 가구 수입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 예술가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예술인 가구가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2. 예술인의 직업실태

- 예술인의 정규 고용직 비율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수의 예술인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임.

- 다수 예술인의 고용지위가 자유업 또는 자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와 관련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0~2006)에서 재구성.

[그림 2-4] 예술인의 취업 형태

-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의 교육직 종사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
- 큰 흐름으로 보면 1997년의 40.7%에 비해 2006년 25.2%는 대폭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전체 예술인의 4분의 1 정도가 교육직에 종사하고 있음(1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25,000명 정도가 교육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2-1> 예술인의 교육직 종사비율 추이

구분	2006 조사	2003년 조사	2000년 조사	1997년 조사
전체	25.2%	26.8%	31.5%	40.7%
문학	21.5%	20.0%	32.0%	48.2%
미술	41.0%	48.0%	50.7%	75.8%
사진	8.5%	23.5%	15.9%	19.5%
건축	35.5%	20.0%	47.5%	34.0%
국악	27.0%	34.5%	33.3%	27.7%
음악	39.0%	47.5%	57.0%	87.8%
연극	20.5%	14.7%	22.8%	21.5%
무용	47.5%	42.9%	42.0%	66.7%
영화	8.5%	8.8%	8.0%	13.6%
연예	3.0%	6.1%	6.0%	13.0%

*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0~2006)에서 재구성.

<표 2-2> 예술인의 교육직종별 종사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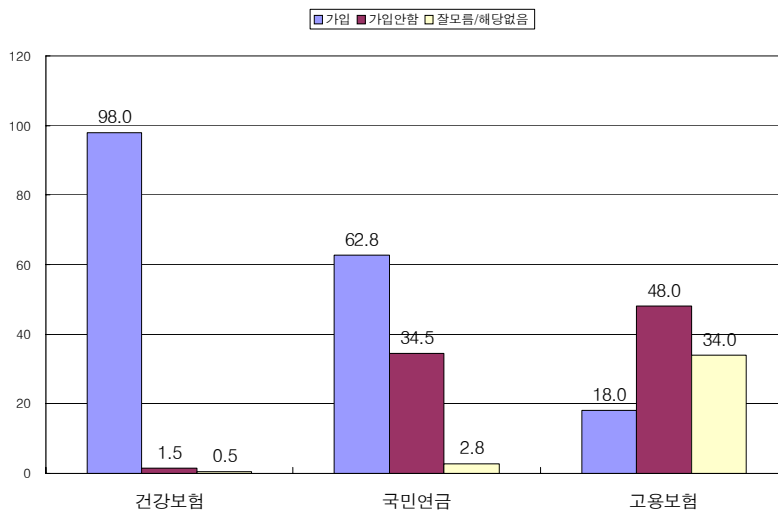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대학 교수	대학 강사	정교 사	준교 사	학원 강사	기타	무직/비 교육직	계
전체	2,000	7.8	7.4	4.3	1.2	4.6	0.1	74.8	100.0
문학	200	8.5	5.0	5.0	0.5	2.5	0.0	78.5	100.0
미술	200	7.5	10.5	14.0	1.0	8.0	0.0	59.0	100.0
사진	200	3.5	2.0	2.0	0.0	1.0	0.0	91.5	100.0
건축	200	26.0	8.5	0.5	0.5	0.0	0.0	64.5	100.0
국악	200	6.0	11.0	1.0	2.5	6.0	0.5	73.0	100.0
음악	200	7.0	8.0	14.0	2.0	8.0	0.0	61.0	100.0
연극	200	3.5	10.0	0.5	1.5	5.0	0.0	79.5	100.0
무용	200	12.0	14.5	5.0	3.0	13.0	0.0	52.5	100.0
영화	200	3.0	3.5	1.0	0.0	1.0	0.0	91.5	100.0
연예	200	0.5	1.0	0.0	0.5	1.0	0.0	97.0	100.0

*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6.

- 교육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대학교수(7.8%)이며, 그 다음으로 대학강사가 7.4%를 보여, 대학교육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예술인의 15.2%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표 2-2〉).
- 정교사는 4.3%, 학원강사는 4.6%로 나타나 예술인과 교육활동의 연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3. 예술인의 복지실태

-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의 9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의 62.8%, 고용보험은 18.0%만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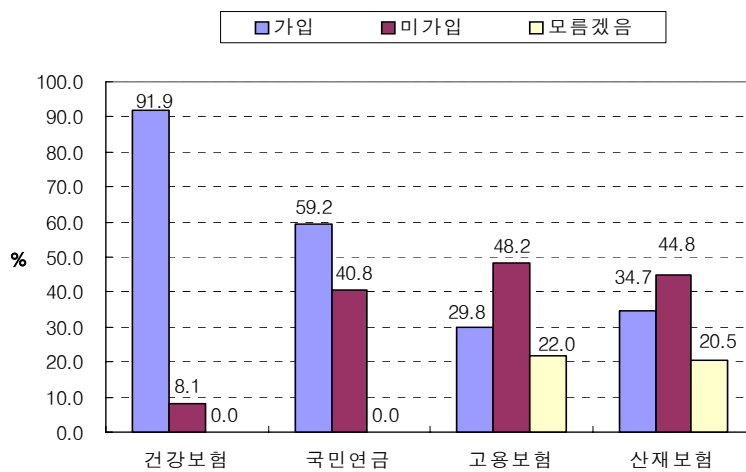
* 자료 : 정갑영,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58쪽.

[그림 2-5]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 특히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예술인 가운데 임금노동자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됨.
- 대다수 예술인의 고용지위가 자유업 또는 자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와 관련되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을 수밖에 없음.

○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문무용수들의 4대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단체 활동을 위주로 하는 무용수의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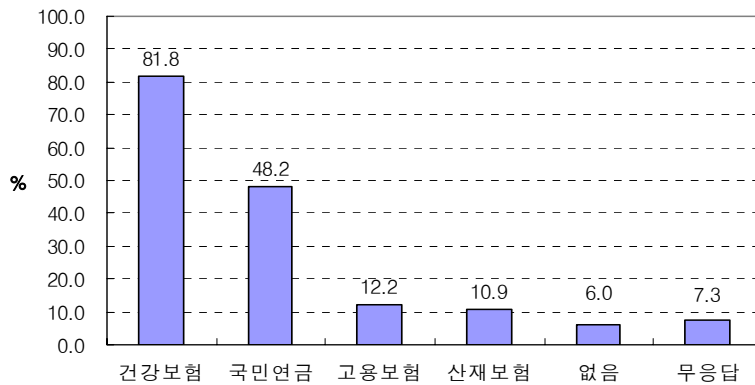
* 자료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2007, 120~125쪽에서 재구성.

[그림 2-6] 전문무용수의 사회보험 가입률

○ 개인 작업을 위주로 하는 시각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문무용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의하면 창작활동에 참

여하는 시각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률(복수응답)은 건강보험 81.8%, 국민연금 48.2%, 고용보험 12.2%, 산재보험 10.9%로 나타났다.



* 자료 : 김달진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2007, 167쪽.

[그림 2-7] 시각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연금제도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수 예술인이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불안정성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음.

제2절 유사 공제회 사례 분석

- 국내 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1971), 대한지방행정공제회(1975), 군인공제회(1984), 대한소방공제회(1984), 경찰공제회(1989), 건

설근로자공제회(1998), 과학기술인공제회(2003) 등의 공적 성격이 강한 공제기관을 포함하여 현재 30여개 이상의 공제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공제기관은 특정 지역·직종·단체 등 동질성이 강한 집단 구성원을 회원으로 하는 상호부조적 특성을 지닌 기관으로 가입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운영주체 및 준거법률(특별법상 24개 기관, 민법상 8개 기관, 기타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의 한 방법으로서 공적 성격을 가진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내 유사 공제회 중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공제회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 (사)실연예술가단체협의회(약칭 예단협)의 ‘예능인연금’ 운영 사례도 함께 분석해 보았음.

1. 과학기술인공제회²⁾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활동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혁을 보면 2002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제정하고, 200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위원회 발족을 거쳐, 2003년 6월 설립되었음.

2) 이하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서술은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sema.or.kr>에서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2002.12.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 제6815호) 제정 공포
- 2003.01.07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위원회 발족
- 2003.05.30 과학기술인공제회 창립총회
- 2003.06.17 법인설립 허가(과학기술부)
- 2003.07.07 초대 이승구 이사장 취임 및 설립 등기
- 2004.11.04 퇴직공제(연금)사업 및 적립형공제사업 출범
※ 정부출연금 200억원 지원(자본금)
- 2005.10.25 제1회 대의원회(창립총회) 개최
- 2005.11.0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법률 제7689호) 공포
- 2005.11.30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제정공포(과학기술부령 제79호)
※ 정부출연금 200억원 지원(자본금)
- 2006.04.01 과학기술인 복지사업 본격 시행
- 2006.08.01 제2대 이승구 이사장 취임

나. 조직 구성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조직은 이사장, 상근이사, 감사(비상근), 의결기구(대의원회, 이사회), 집행기구(경영기획본부, 사업운영단)로 구성됨.



[그림 2-8]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직도

다. 회원 대상 및 가입 현황

○ 일반회원

- 정부 출연(연), 연구회 및 연합대학원대학 임직원
- 특정 연구기관의 임직원
- 기업부설 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임직원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공제회의 임직원

○ 특별회원

- 공제회의 일반회원이었던 자로서 퇴직 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공제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

○ 회원가입 규모는 2007년 현재 개인 8,134명이고, 기관회원은 95개 기관, 회원의 부담금 총액은 440억원임.

<표 2-3>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및 부담금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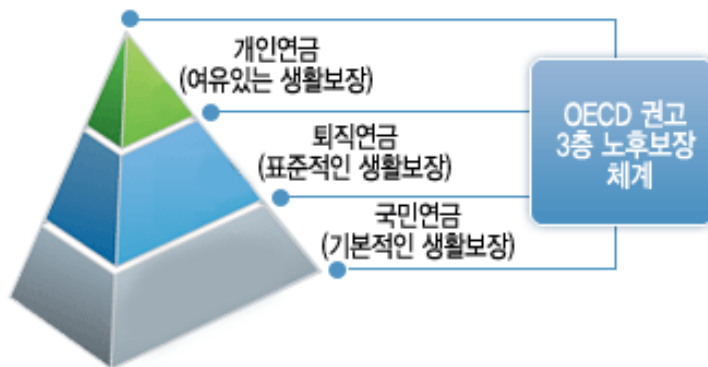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기관현황(개)		13	42	64	95
회원현황 (명)	과학기술인연금	101	113	5	5
	적립형공제	304	3,362	6,312	8,129
	합계	45	3,475	6,317	8,134
부담금현황 (백만원)	과학기술인연금	428	870	33	49
	적립형공제	122	8,237	22,355	44,044
	합계	550	9,107	22,388	44,093

라. 주요 사업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퇴직연금급여사업(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그리고 복지후생사업이 있음.

1) 과학기술인연금사업(퇴직연금급여사업)

- 2005년도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3층으로 구성된 노후보장체계를 갖추.
-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인의 사정에 맞게 설계한 퇴직연금 제도임.



[그림 2-9] 3층으로 구성된 노후보장체계

- 과학기술인연금은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사용자가 매년 일정률의 퇴직공제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
- 부담금은 회원소득액의 10.8%로 책정
 - [부담금 적립액 + 운용수익] + 특별공로금
 - 전환금 8.3%(퇴직금) + 기여금 2.5%(개인 부담) = 10.8%



* 특별공로금은 「아공계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 조성자금 운용수익을 활용, 공로금 지급은 정부출연(연)에 한정되며 대상기관은 별도로 정함.

[그림 2-10] 과학기술인연금의 부담금 비율 및 급여 구조

○ 퇴직급여의 지급

- 퇴직시 납부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단, 연금수급자가 사망시에는 잔여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특별공로금이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임.

<표 2-4> 과학기술인연금 급여지급 유형

급여종류	수급대상자	지급개시	지급기간	지급주기
퇴직연금	- 10년이상 납부자 ※ 단, 공제회 설립 후 2년 이내 가입하고 부담금 5년 이상 납부회원은 연금수급 가능	퇴직 후 55세 이후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연 1회, 2회, 4회, 12회 중 선택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납부자 또는 일시금을 선택한 자	퇴직시	1회	-
유족일시금 (추가항목)	- 연금수급자 사망시 잔여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사망시	1회	-

○ 세제혜택

<표 2-5> 과학기술인연금과 일반퇴직금의 세제 혜택 비교

구분	법인	개인
과학기술인 연금 (퇴직연금제도)	사외적립금 전액 손금산입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세 공제액 확대 : 연 600만원 → 연900만원 - 연말소득공제 : 300만원(개인부담금에 한함) - 적립금 운용 단계 : 적립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자 등 수입은 급여수령시까지 과 세 이연
일반 퇴직금제도	사내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추계액의 40% - 2007~2008년 35%, 2009년 30%축소 	퇴직소득세 공제한도를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 50% → 45%

2) 적립형공제급여사업

○ 개인 적금(적립형 연금) 유형에 해당함.

○ 부담금

- 5~100구좌 한도 내에서 5구좌 단위로 가입(1구좌당 1만원)
- 부담금 납부방법 :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
- 부담금 납부기간 : 가입시 ~ 퇴직시
- 부담금 조정 : 자금사정에 따라 증·감좌 가능(가입 또는 증감좌 후 3개월 이후부터)

○ 회원지급률

- 회원지급률(이율) : 6% 연복리
- 회원지급률 조정 : 시중금리가 10% 이상 변동될 시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 가능
- ※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특례 적용(0~4.0%)

○ 가입 구좌수의 변경

- 회원은 가입기간동안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증좌 또는 감좌가 가능. 단, 증감좌는 가입 또는 최후 증감좌 반영 후 최소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5구좌 단위로 신청
- 신청방법 : 증감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회사)의 공제담당자에게 제출

○ 세제혜택

- 적립형 공제 급여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특례’를 적용받아 일반과세보다 낮은 세제혜택 적용
-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

<표 2-6>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와 일반적금융상품의 세제 혜택 비교

구분	이자소득세	종합소득과세
적립형공제 급여	0~3.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소득세법 제63조) - 50구좌 20년 납부 시 약 3.5%	-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 소득과세에서 제외(소 득세법 제14조제3항제 3호)
일반적금융상품	15.4%(일반 이자소득세) 9.5%(세금우대 세율)	- 연간 금융소득이 4,000 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 과분은 종합소득과세 를 함

○ 급여의 지급

- 퇴직시 회원이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면 공제회는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부담금의 원리금을 선택된 지급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
- 수급대상자 사망시 잔여금액은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급

- 퇴직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며, 해지환급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함.

<표 2-7>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의 지급 유형

급여종류	수급대상자	지급개시	지급기간	지급주기
적립형 공제연금	- 10년 이상 납부자 ※ 단, 공제사업 본격출범 후 2년 이내 가입하고 부담금 5년 이상 납부회원은 연금 수급가능	퇴직 후 만 55세 이후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연 1회, 2회, 4회, 12회 중 선택
적립형 공제일시금	- 10년 미만 납부자 또는 일시 금을 선택한 자	퇴직시	1회	-
유족일시금 (추가항목)	- 수급대상자의 유족 ※ 단, 유족순위는 민법에 따름	수급대상 자 사망시	1회	-

3) 대여사업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는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표 2-8>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여사업 개요

구분	본인한도대여	연대보증대여
대여자격	적립형공제부담금을 1년이상 불입한 회원 또는 부담금원 금이 300만원 이상인 회원	대여자격이 있는 회원 중 대여를 받지 않은 회원이 본인부담금을 담보로 제공시
대여한도	적립형공제부담금 원금의 90% 이내 10만원 단위	- 보증인 본인대여한도 내에서 총 보증 금액 1,000만원까지 가능 - 총 보증 가능 인원 2인
대여금리 (연체율)	금리 5.9%(18%)	
지급방법	회원본인 계좌로 지급	
지급일자	매주 2회(화, 금)	
재대여처리	대여신청 6개월 이후 대여한도 범위에서 10만원 단위 기존대여 원리금 정산 후 잔액 지급	
상환처리	매월 21일 회원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4) 기타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할인 서비스

- 회원의 복지증진 및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도시설 할인 제공 서비스임.
- 이용대상 : 개인의 경우 공제회원, 단체의 경우 최소 10인 이상의 공제회원이 재직 중인 업무협약 체결 법인
- 총 17개 시설 할인 혜택 제공 : 대명리조트(7), 금호리조트(4), 그 외 체인콘도(6)

○ ‘과학기술인복지카드’ 서비스

- 복지기금 적립과 카드서비스 혜택을 통한 회원복지 및 서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행
- 가입자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나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면서 금융신용에 이상이 없는 회원에 한함.
- 복지카드 사용시 얻게 되는 주요 혜택은 주유·놀이공원·면세점·영화 할인 서비스, 무이자(2~3개월) 할부 서비스, 신용판매 이용금액의 0.1% 포인트 적립 등

○ 의료기관 지정할인 서비스

-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비, 암예방검진비, 시력교정수술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무료법률 자문서비스 제공

○ 기타 제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보험, 여행 할인 서비스, 호텔 할인 등 제공

2. 건설근로자공제회³⁾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은 잦은 이동, 수주생산, 중층적 하도급구조, 불안정한 사업장, 불명확한 고용관계, 잦은 임금변동, 실업과 취업의 반복을 통한 단속적 근로의 양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사회보험체계로부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음.⁴⁾
-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주요 역할 및 사업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 적립된 공제부금증식을 위한 사업
 -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등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2003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명칭 변경 등의 연혁을 거쳐 왔음.
 - 1996.12.31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7.12.09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등기
 - 1998.01.01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업무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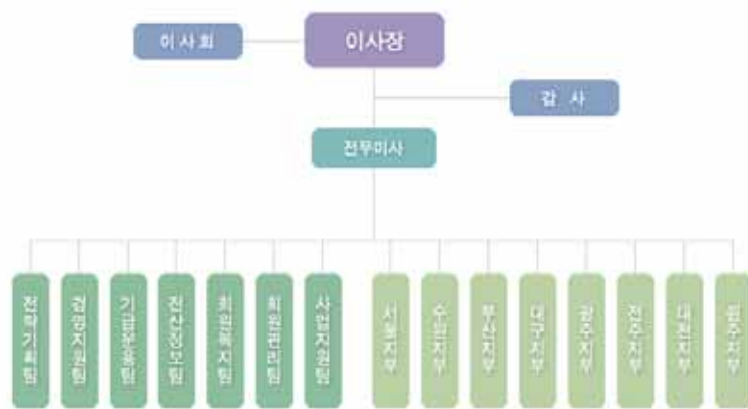
3) 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서술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kcwmf.or.kr>에서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4) 심규범,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1~3쪽 참고.

- 2002.02.05 서울지부 개소
- 2003.07.01 명칭 변경(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 2006.01.01 전국 7개 지부 개소(수원, 원주,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 2006.12.18 제4대 손정웅 이사장 취임

나.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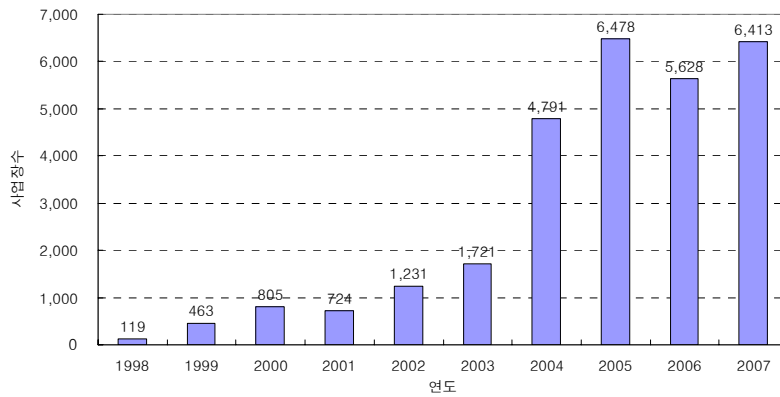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감사, 의결기구(이사회), 집행기구(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기금운용팀, 전산정보팀, 회원복지팀, 회원관리팀, 사업지원팀), 8개 지부(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원주)로 구성됨.



[그림 2-11]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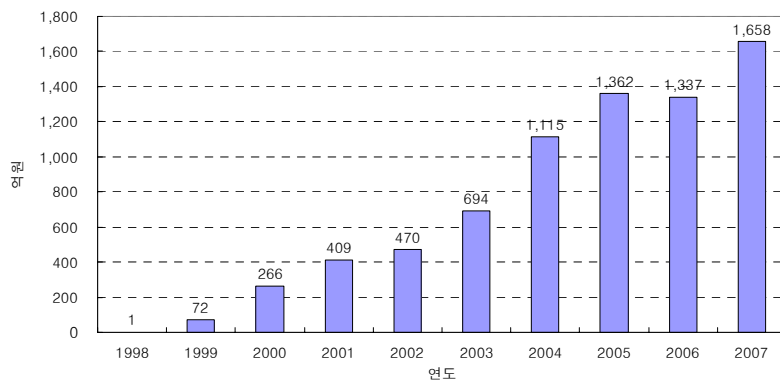
다. 운영 현황

- 가입사업장 현황은 총 28,373건(2007.12.31 현재)이며 지난 10년간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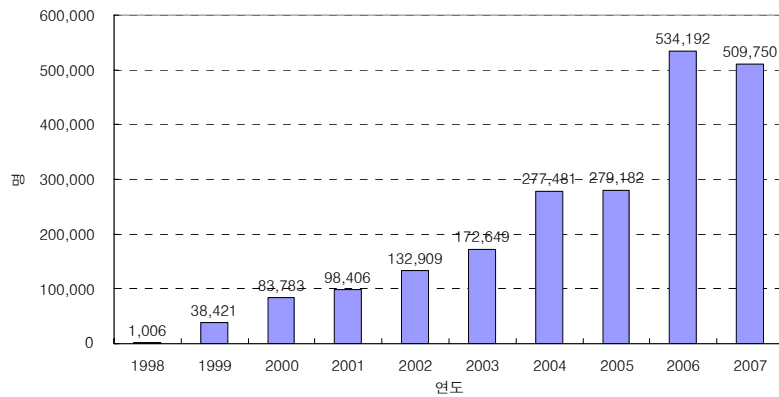
[그림 2-12]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사업장 현황

- 공제부금 수납 현황은 총 7,384억원(2007.12.31 현재)이며, 지난 10년간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2-13]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수납 현황

- 피공제자(근로자) 현황은 총 2,127,832명(2007.10.31 현재)이며, 지난 10년간 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2-14]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근로자) 현황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⁵⁾

1) 퇴직공제제도 개요와 특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음.
 -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복리이자를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퇴직공제제도’의 특징
 - 안정적인 퇴직공제금 지급 보장 : 일반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과는 달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은 법

5)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주요내용 및 EDI 사용방법 해설」, 2008. 요약 및 재구성.

률에 의거 공제회라는 공적 기구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안정적인 퇴직공제금 지급이 보장됨.

-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특수한 제도 : 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중 특히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써 일용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하여 성실시공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젊은 인력의 건설업 유입에 기여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임.
- 소득재분배 기능 : 퇴직공제금의 재원은 수혜자인 일용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원가 등에 반영되어 국가 등이 부담하게 되므로 계층간 소득재분배로 균형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됨.

2) 가입대상 건설공사

- 당연가입 대상공사(건고법 제10조제1항, 영 제6조,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로서 200호 이상인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로서 200호 이상인 공사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200일 이상인 공사
- 임의가입 대상공사(법 제10조제2항, 영 제10조)
 - 당연가입 대상공사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건설사업주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3)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피공제자의 범위(법 제11조, 영 제11조, 규칙 제12조)
 -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공제 적용에서 제외됨.

4)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근로자 인적사항 및 근로일수 파악
 - 공제가입 사업주는 매월 근로내역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의 인적사항 및 근로일수를 파악하여야 함.
 - 특히, 용역근로자 등 단기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파악하여 두어야 함.

-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내역 신고(법 제13조, 영 제12조 제1항)
 -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고,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EDI 신고하여야 함.
- 근로일수 산정기준
 - 1일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함.
 -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함.
 -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따름.
- 공제부금 산정 방법
 - 매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누계 × 4,100원(2008년 이후 착공 공사에 한함)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2,100원, 2007년에 착공된 공사는 3,100원임.

5) 퇴직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달한 때,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월복리)를 합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함.

※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포함)를 의미함.
-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 청구권자

-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됨(법 제14조 제1항).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 규정을 준용(법 제14조제2항)

○ 퇴직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서식 1부
- 계좌이체가 가능한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1부
- 피공제자가 증지가 첩부된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첩
-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청구인의 자격 및 유족의 순위에 관한 증명서 1부(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제출

○ 퇴직공제금 청구사유 및 증명서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9> 건설기술공제회 퇴직공제금 청구사유 및 증명서류

퇴직공제금 청구사유		증명서류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세무서에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무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실내포장마차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자가 영업하고 있는 사진 및 영업업종, 영업장소, 인근상점의 연락처가 기재된 사유서와 물품구입 영수증(구입처 전화번호 기재)
	농업(축산)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농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축사육증명서(축산업인 경우)
건설업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법인인 경우	사업주의 고용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체명과 급여개시일이 표시된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고용일이 기재된 사업주의 고용증명서(근무지의 연락처 기재)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용근로자(정규직)가 된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고용증명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증명서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학업, 취업 준비(학원수강, 공무원 시험 준비 등)	재학증명서(복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군입대	입영통지서 등
	전업주부, 결혼(여자)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등
	외국인 취업만료	항공권 사본 등 귀국 입증서류
	기타	관련 입증서류(입증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퇴직 사유서)

○ 퇴직공제금의 산정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이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

6) 사업주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제재규정

○ 지원 내용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경우는 퇴직공제부금비가 공사원가에 반영됨.
- 임의가입대상공사를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
- 공제가입사업주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 시 우대되어 공사수주에 유리함(기술능력평가액에 공제부금 납부액의 10배수를 가산).

○ 이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피공제자의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마. 건설근로자에 대한 추가 혜택

○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가점 부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 동일순위 내에서 3점 가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제9호)

3. 일본 예능인연금제도⁶⁾

가. 일본의 사회보장체계와 예능인연금제도

1) 일본의 사회보장체계

- 일본의 사회보장체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형 사회보험체제로 구축되어 있음.
- 국민연금(임금근로자의 경우 후생연금,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5대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함.
- 이중 건강보험은 정부관장 직장건강보험, 직능별 조합관장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의 체계로 구분되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2) 일본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사각지대

- 연금의 경우,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생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편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15,000엔의 납입금액 지불능력의 한계에 따른 이중의 사각지대 발생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지위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장애, 사망 등의 각종 재해와 실업에 따른 사회보장 체계 전반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임.
- 건강보험은 예술인의 고용지위에 따라 정부관장 직장건강보험, 직능별 조합관장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중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6) 이하 일본의 예능인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관광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2007, 251~255쪽에서 재구성.

3) 일본의 예술인 복지 현황

-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화된 사회보장체계가 부재하므로, 무대예술인들의 재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적 제도로써 ‘예능 관련 노재 문제 연락회’(약칭 노재련)를 1989년 결성하여, 관련 자료수집과 소송사건 지원,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 단위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건강보험조합을 운영하고 있음(현재 도쿄, 오사카, 교토에 예술인 건강보험조합 운영중).
 - 고용지위가 자영업자인 예술인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30%인데 반해, 예술인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 내외임.
- ‘예능인연금제도’는 임금근로자의 ‘후생연금’, 자영업자의 ‘국민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대예술 분야 실연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 연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4) 예능인연금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은 단속적·부정기적 취업과 취업장소 변경의 반복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관계 법률에서 예술인으로서 특수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함.
- 일반 근로자의 평균 소득기준과 비교해 볼 때 예술 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입은 매우 적으며, 예술인 내부에서도 소득 수준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연 평균소득 300만엔 이하인 예술가가 전체의 50% 내외를 차지함).
- 이러한 상황에서 무대예술 분야 실연 예술인들의 노후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연금 제도로써 1973년 4월 ‘예능인연금제도’가 도입됨.

- ‘예능인연금제도’는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약칭 ‘예단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단협 산하 71개 회원단체 70,0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1965년 예단협 창립시의 설립취지문에는 ‘기술의 향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복리후생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총집결을 꾀해 일본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음.
 - 창립 총회에서는 ‘복리후생사업’의 사업목표로 ‘의료기관의 설치, 연금보험제도 확립, 공제제도 촉진, 양로시설 설치’를 주장함.
 - 1973년 4월 ‘예능인연금’ 제도 도입하였음.
- ‘예능인연금’의 실적과 역할
 - 창립 1년 뒤인 1974년 3월말, 가입자수 1,144명, 납입금 총액 3,800만엔이었던 ‘예능인연금’은 30년이 지난 2003년 현재 가입자·수급자 총수 5,876명, 연금자산 총액 150억엔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연금·일시금 수급자수는 7,000명 내외이며, 총 지급액은 120억엔 정도임.

나. ‘예능인연금제도’의 운영원리 및 체계

- 1) 예단협 회원을 중심으로 예능인 전원 연금의 추진
- 예단협에 소속된 약 70,000명의 실연가 및 스태프 중 예능인연금 가입자는 10% 내외임.
 - 제도 도입 시 목표했던 ‘예능인 전원 연금’에 접근하기 위해, 가입자 확대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예능인의 가입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지만, 아직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가입자가 늘어나면 납입금의 운용효율이 높아지고(스케일 메리트), 운용 환경이 호전되면 이차익(利差益, 운용 실적과 예정이

월간의 차)도 상승함.

- 이 이차익은 연금·일시금의 증액, 그 외 복지사업에 충당할 수 있음.
- 이미 경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을 꾀하기 위해 ‘예정이율 자동 개정’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자산운용위원회에서도 책임 있는 운용을 목표로 삼고 있음.

2) ‘예능인연금제도’의 특징 및 운영원리

○ 적립형 사적 연금

- 공적 연금과는 달리 ‘예능인연금’은 ‘스스로 적립한 납입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적립저축형 연금
- 1개 구좌 납입액(월 1,220엔)을 기준으로 1인당 300구좌(월 366,000엔)까지 가입구좌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음.
- 구좌수는 매년 10월에 늘릴 수 있으며, 수시로 줄일 수 있음.
- 만일 적립 도중에 탈퇴·사망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납입금과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탈퇴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연금 수급 중, 전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남은 기간분을 ‘유족연금’ 혹은 ‘유족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함.

○ 가입 자격

- 가입자격은 예단협 회원단체 등의 회원으로 만 18세 ~ 70세까지.
- 가입 자격자의 배우자도 가능함.

○ 수급기간 및 연령

- 연금 수령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네 유형 중 선택 가능함(단, 수령 개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65세가 수령 개시 연령이지만, 개시를 60세로 앞당기는 것, 또는 75세로 늦추는 것도 가능함.

○ 특별가산연금

- 매월 적립 외에 언제라도 상황이 좋은 때에 입금하여 장래의

연금을 늘릴 수 있는 특별가산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납입금은 1구좌당 10만엔, 구좌수는 자유롭게 몇 번이고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10년이며, '예능인연금'과 합산하여 급부함.

○ '예능인연금'은 신탁 재산으로 관리

- '예능인연금'은 예단협과 신탁은행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함.
- 따라서 '신탁재산'이 되므로, '신탁법'의 적용을 받아 만의 하나 신탁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도 보전.

3) 예능인연금제도 운영방식 및 자산규모

- 연금급여 지급은 가입 예술인이 65세 이후 수령하되, 10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시불 지급은 불가함.
- 현재 연금급여는 '납입원금+1%'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금급여 지급 이자율은 연금제도 도입 초기 5.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참고로 현재 일본의 금리는 0.01% 정도 수준임).
- 예능인연금 운영을 위해 (사)예단협 내 연금 사업부가 설치되어 4인의 실무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금제도 운영사업비는 연 5,000만엔씩 (사)예단협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표 2-10> 일본 예능인연금 구좌별 가입기간 및 급여지급액 기준표

(단위 : 엔)

월 투입년수	25세 가입	35세 가입	45세 가입	55세 가입	60세 가입
	40년 적립	30년 적립	20년 적립	10년 적립	5년 적립
1구좌 (1,220엔)	75,539	53,749	34,024	16,166	7,882
5구좌 (6,100엔)	377,695	268,745	170,120	80,830	39,410
10구좌 (12,200엔)	755,390	537,490	340,240	161,660	78,820
20구좌 (24,400엔)	1,510,780	1,074,980	680,480	323,320	157,640
50구좌 (61,000엔)	3,776,950	2,687,450	1,701,200	808,300	394,100
100구좌 (122,000엔)	7,553,900	5,374,900	3,402,400	1,616,600	788,200

○ ‘예능인연금’ 가입자 및 자산규모 현황

- 2007년 3월 현재 가입자 5,619명 / 자산규모 150억엔
- 예단협 자체적으로 가입자 8,000명 / 자산규모 180억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때는 가입자가 8,000명 규모에 도달했으나, 연금 지급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연금 가입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연금 조성액은 150억엔이나, 가입회원 대상 연금 지급액은 180억엔 정도로 산출되어 30억엔 정도가 부족한 실정임.

4.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2년 제정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 형태의 공적 공제회로서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공적 재원의 출연과 회원 납부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과학기술인연금(퇴직급여 공제사업), 적립형 공제 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8,134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95개의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영사례는 공제회 조직의 법제도적 근거와 공적 자원 조성방식 등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공제사업 내용은 가입대상인 과학기술인들이 기존 사회보험 등의 1차 사회안전망에 가입된 것을 전제로 추가적인 연금급여의 혜택과 복지·후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 공제’사업은 ‘문화예술인공제회’의 ‘문화예술인연금’ 제도 설계 시 직접적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급여공제사업 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이 비정규·단속적 노동이라는 점과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점에서 예술가 계층의 직업적 특성과 유사한 점이 많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급여공제사업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기금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의가입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 납부금의 1/3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법정 퇴직금 지급 등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예술가 계층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급여사업을 도입할 경우 일정 정도 생계지원 및 소득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예능인연금제도’는 민간의 자발적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한 공제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특별법에 기반한 공적 공제회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과 그러한 한계로 인해 연금 등의 공제급여 사업에 대한 공적 재원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공제사업을 통한 소득 보장 및 생계지원의 실질적 보장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 공제’와 운영 원리가 유사하여 ‘문화예술인공제회’의 ‘문화예술인연금’ 설계 시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본의 ‘예능인연금제도’의 운영 사례는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는 데 있어, 특별법에 근거한 공적 공제

회의 조직모델과 안정적인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공적 재원의 조성방안,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에 부합하는 보완적 적립형 연금제도 설계,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 지원제도 마련 등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3 장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기본구상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절 공제회 설립의 기본 방향

1. 공제회의 개념과 설립 목적

- 공제(共濟, Mutual Aid)는 사전적으로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공제회(共濟會, Mutual Aid Association)란 일반적으로 구성원 상호간의 생활 부조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결사체를 의미함.
 - 특정 직업 집단 내에서 생활상의 사고(즉 질병·실업·부상·사망 등)나 곤란함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의 부금을 적립하였다가 유사시 급여로 제공하여 해결해 나가는 생활 부조 조직의 성격을 가짐.
 - 17세기 중엽 이래 영국에서 발전한 우애조합(友愛組合:friendly society)이 그 원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15년 지방금융조합의 화재공제를 그 효시로 볼 수 있음.⁷⁾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Korea Artist Mutual Aid Association)는 문화예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로서, 문화예술인의 생활 보조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공제회의 기본 성격은 특정 직업집단 내부 구성원 사이의 자주적인 상호부조 조직에 해당하나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공공 보조를 결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 목적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인 상호부조 및 공공부조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추구함.

7) 김진선 외,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 p.7.

-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모든 문화예술인이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하는 데 기여함.
-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통해 창작환경의 개선과 창작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

2. 공제회 설립의 기본 방향

- 공제회는 구성원들의 논의에 따라 사업 내용이나 기능, 조직구조, 법적 성격을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공제회도 구체적인 사업이나 운영내용은 문화예술인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백지 위에 스케치하듯 그려나갈 수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문화예술인공제회의 내용은 하나의 예시안에 지나지 않으며, 향후 실제 공제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방향과 운영방안이 설정될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핵심 기능을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두느냐 아니면 생활보조에 두느냐에 따라 기본 방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 공제회의 일반적 기능은 공제회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있으나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함께 구비하도록 요구 받고 있음.
- 많은 문화예술인이 4대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 문화예술인을 진입시키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공제회와 같은 별도의 보완적 사회보장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공제회가 사회보장제도의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 내부의 생활 보조 기능(부가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논의와 별도로 현재 문화예술계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실연예술가 및 스태프 등의 사용 시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하여 4대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되, 사용자(제작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적 보조 체계를 개발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공제회 가입 범위와 기준

1. 가입 범위 및 예술인 규모

가. 가입 범위

1) 문화예술의 개념

- 국정과제에 제시된 ‘문화예술인공제회’에서 ‘문화예술인’의 개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제회 가입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
 - 광의의 ‘문화인’에는 언론 및 종교 분야 종사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협의의 ‘예술인’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활동 종사자로 제한될 수 있음.
- ‘문화예술’의 개념 범위는 명료하지 않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제시된 ‘문화예술’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호에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의 장르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좁은 의미의 ‘예술’로 분류하기 어려운 ‘어문’과 ‘출판’을 제외하면 ‘예술’에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 연예, 국악, 사진, 건축의 10장르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근거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인 공제회의 가입 대상 범위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규정해 볼 수 있음.
 - 다만 여기에서 창작예술가 및 실연예술가 외에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기획·경영인력, 행정·관리인력, 기술인력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2) 가입 대상에 따른 공제회 유형

- 앞에서 본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과 좁은 의미의 ‘예술’, 또는 넓은 의미의 ‘문화’의 개념 범위를 고려하여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가입 대상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가형) 문화예술진흥법상 12개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연구기관 등 문화기관과 게임산업·콘텐츠산업·신문사·방송사 등 문화산업체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 (나형)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개념을 적용하여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및 출판 등의 12개 분야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 (다형)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개념 가운데 좁은 의미의 예술로 분류하기 어려운 어문 및 출판을 제외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및 연예 등 10개 분야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 (라형) 문화예술진흥법상 10개의 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산업적 성격이 강한 영화와 연예를 제외한 8개 분야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

<표 3-1> 가입 대상에 따른 공제회 유형

유형	해당 분야			성격	비고
가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출판, 문화기관, 문화산업체	문화예술인 공제회	
나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어문, 출판	문화예술인 공제회	문예진흥법 제2조
다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영화, 연예		예술인 공제회	
라형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예술인 공제회	

- 공제회 사업 규모를 위해서는 대상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적 재원을 통한 수혜 구조나 직업적 동질성 확보를 고려할 때는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그 대상 범위가 넓은 가형이나 나형의 ‘문화예술인공제회’보다는 그 대상 범위가 좁은 다형이나 라형의 ‘예술인공제회’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화와 연예 부문에서는 현재 영화산업노조 및 한국영화인복지재단,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및 (사)한국대중문화예술인복지회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 및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어 새롭게 설립을 추진하게 될 ‘문화예술인공제회’는 그 범위가 가장 좁은 ‘라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그 경우 공제회의 명칭도 ‘예술인공제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문화예술인 규모

- 단일한 예술인 조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등록회원수는 15만 8천여명(2005.12 현재)으로 알

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연예와 영화 부문을 제외하면 6만 여명으로 추산됨.

- 그보다 규모가 작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회원이나 두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예술인까지 포함하면 최소 20만에서 최대 30만 명까지로 추정됨.

- 그 경우 영화나 연예부문을 제외하면 10만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정됨.

○ 한국센서스(200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표준산업분류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총 334,67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91,944명)과 기타 오락관련 산업(121,069명)의 213,013명을 제외하면 영화·방송·공연·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121,661명으로 추산됨.

- 같은 2000년 한국센서스에서 표준직업분류상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및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중 문화예술 관련 직업군의 종사자 규모를 보면 전문가 167,536명, 준전문가 10,075명으로 모두 177,611명으로 집계됨.

<표 3-2> 한국센서스에 의한 문화예술인 규모

(단위 : 명)

직업 분류	취업자	남자	여자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5,130	2,290	2,840
작가 및 관련 전문가	45,722	25,501	20,221
창작 및 공연예술가	102,041	52,016	50,025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14,643	10,922	3,721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10,075	6,720	3,355
합계	177,611	97,449	80,162

*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재구성.

- 한편 2002년부터 연간 직업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관련 통계(□□직업지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수는 연간 30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3> 참조).
- 여기에는 방송, 영화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예술계강사가 13만 명 내외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 기술 스태프와 기획 스태프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며, 순수한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만 집계하는 경우 그 수는 대폭 축소될 수 있음.
-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만 집계하는 경우 2003년, 2004년에 10만 명을 유지하다가 2006년도엔 7만 5천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3-4> 참조).
- 최근 예술인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진가의 수가 대폭 감소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3-3> 직업지도에 나타난 문화예술인 직업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6,530	7,812	7,292	11,167	11,856
행사기획자	8,238	10,243	4,792	11,879	7,472
예능계 강사	138,335	147,011	131,570	129,985	126,889
작가	13,669	15,323	17,028	16,569	13,799
번역가	8,067	13,561	11,359	10,019	8,375
출판물기획전문가	5,250	7,720	8,557	11,743	5,033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18,563	15,775	12,476	20,829	19,506
학예사 및 문화재보존원	3,696	2,867	2,272	3,135	3,72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1,927	11,622	10,380	15,039	10,047
화가 및 조각가	5,590	11,446	10,291	7,863	5,653
지휘, 작곡 및 연주가	12,156	7,372	13,678	9,610	12,762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무용가 및 안무가	3,616	0	1,131	0	0
사진가 및 사진기자	3,194	4,105	20,149	29,364	25,671
국악 및 전통예능인	2,196	4,120	2,892	3,079	1,159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11,688	10,473	12,390	12,256	9,648
감독 및 연출자	9,131	14,348	10,785	8,402	10,440
연기자	4,971	5,862	3,605	5,090	3,402
영화, 연극 및 방송 기술감독	2,350	3,188	3,239	5,423	3,090
촬영기사	16,515	22,720	8,766	7,391	6,759
음향 및 녹음기사	6,715	6,718	6,254	6,112	3,786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	6,129	5,681	3,807	3,434	5,122
조명기사	3,069	4,262	2,873	2,684	2,020
기타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기술직	11,551	6,892	9,808	5,176	4,348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	5,729	2,218	4,657	3,592	3,976
합계	318,876	341,340	320,051	339,842	304,536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지도□□(2003~2007)에서 재구성.

<표 3-4> 직업지도에 나타난 예술인 직업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작가	13,669	15,323	17,028	16,569	13,799
번역가	8,067	13,561	11,359	10,019	8,375
화가 및 조각가	5,590	11,446	10,291	7,863	5,653
지휘, 작곡 및 연주자	12,156	7,372	13,678	9,610	12,762
무용가 및 안무가	3,616	0	1,131	0	0
사진가 및 사진기자	3,194	4,105	20,149	29,364	25,671
국악 및 전통예능인	2,196	4,120	2,892	3,079	1,159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11,688	10,473	12,390	12,256	9,648
감독 및 연출자	9,131	14,348	10,785	8,402	10,440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	5,729	2,218	4,657	3,592	3,976
합계	75,036	82,966	104,360	100,755	91,483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지도□□(2003~2007)에서 재구성.

- 한편 예술계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자수는 연간 4만 7천명에서 4만 8천명 선으로 5년에 25만명 정도가 배출된다고 볼 수 있음.

<표 3-5> 예술계 대학/전문대학 학과 및 졸업생 현황

구분	학과수(개)				졸업생수(명)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예체능교육	53	50	49	45	1,585	1,672	1,529	1,679
디자인	896	972	1,050	999	24,573	24,767	24,856	22,659
공예	57	71	71	74	1,516	1,179	1,172	1,521
사진, 만화	112	123	127	119	2,290	2,577	2,542	2,375
영상 예술	126	153	168	192	2,534	2,473	3,189	3,273
무용	58	63	70	58	1,338	1,287	1,200	1,218
미술, 조형	190	202	205	195	4,475	4,312	4,253	4,299
연극, 영화	83	102	98	110	1,367	1,590	1,555	1,653
음악(국악포함)	291	316	314	324	8,508	8,490	8,449	8,488
계	1,866	2,052	2,152	2,116	48,186	48,347	48,745	47,165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4~2007에서 재구성.

* 전문대학, 대학교 통계만 합산한 결과임(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제외).

-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통계를 종합해 보면 좁은 의미의 예술인은 최소 7만 5천명에서 최대 20만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는 30만명에서 35만명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음.
- 좁은 범위의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잠재적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 인구는 대략 10만명에서 15만명 정도로 산정해 볼 수 있음.

2. 가입자격 및 기준

가. 예술인의 개념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가입 범위를 ‘예술인’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예술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난제 중의 난제임.
- 유네스코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 1980)에 제시된 예술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⁸⁾
 - 예술작품의 창조자, 실연자(창조적 표현의 제공), 그리고 재창조자를 모두 예술인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직업적 경력이나 사회적 인정에 상관없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의식에 기초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까지 예술인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 권고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창조적 표현을 제공하거나 또는 재창조하는 사람, 예술적 창조를 자기 삶의 본질적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 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고용되어 있거나 협회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이 권고의 적용 범위는 ‘세계저작권협약(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과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그리고 ‘로마협약(the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에 제시된 창작예술가와 작가, 실연자, 그리고

8)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1/001114/111428mo.pdf>

번역가로 구체화되어 있음.

- 유네스코의 권고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예술인의 지위 및 예술인과 제작자의 업무관계에 관한 법률’, 일명 ‘예술인 지위 법(Status of the Artist Act, 1992)’의 제6조 제2항(b)에 제시된 예술인 개념은 다음과 같음.⁹⁾

(가) (캐나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 연극, 저술(문학) 또는 음악 작품의 저자, 또는 시청각작품의 전체 감독을 맡은 연출가
(나) 음악, 저술(문학), 연극에서 또는 서커스, 연예, 마임, 인형극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주하고, 노래하고, 낭송하고, 감독하거나 연기하는 자
(다) 공연예술, 음악, 무용 및 연예 오락,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비디오, 레코드, 상업적 더빙이나 녹음, 미술과 공예, 또는 시각예술에서 어떤 형태이든 작품의 창조에 기여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적 범주에 해당하는 자

- (가)에서는 창조적 예술가를, (나)에서는 실연예술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예술 작품의 창조에 기여하는 모든 인력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예·서커스·연예·마임까지 예술의 범위를 넓게 포괄하고 있는 것도 특징임.
-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예술인의 정의를 시도해 보면, 작가나 화가·작곡가 등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창작예술가’와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나 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 ‘실연예술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자에는 시인·소설가·극작가·화가·조각가·작곡가·안무가 등이 있고, 후자에는 배우·무용가·가수·연주가 등의 실연자(實演者)와 그 실연(實演)을 지휘·감독하는 연출가·지휘자·예술감독 등이 있음.

9) <http://laws.justice.gc.ca/en/s-19.6/text.html>

- 이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에 제시된 ‘저작자’와 ‘실연자’의 구분에 그대로 대응함.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나. 문화예술인공제회 가입 자격

- 문화예술인공제회에 공적 재원이 일부나마 지원된다면 그 가입 자격이 엄격하고 또 명료해야 하나 다양한 형태를 가진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일반적인 의미의 예술인의 정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설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의나 기준이 필요함.
-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디아트(D'Art) 보고서 「세금 및 급여 관련 예술인 정의」에서는 정책 및 제도와 관련, ‘직업적 예술인(professional artists)’에 대한 실용적 정의로서 국제 공통의 접근방식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¹⁰⁾
 - ① 멤버십을 통한 정의(Definition through membership) : 예술

10) IFACCA, Defining Artists for Tax and Benefit Purposes, 2002, p.4.

- 가는 공인된 예술가 협회(예, 직업예술가회)의 멤버십을 통해 정의됨.
- 캐나다에서는 독립예술가의 협회 가입 여부에 따라 예술가로서의 직업성 여부를 결정함.
- ② 위원회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committee) : 예술가적 지위는 전문가나 예술적 동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결정됨.
-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예술가의 소득 규정에 관한 법’을 적용 받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에 관해 결정하며, 멕시코에서는 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금 대신 예술 작품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제도에 적용되는 예술인의 자격을 결정하고 있음.
- ③ 당국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authority) : 과세 당국이 예술가로서의 자격을 결정함.
- 아일랜드의 예술가 면세 제도에서 세무당국이 예술가의 자격을 결정.
- ④ 예술적 산출물(작품)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association with artistic output) : 예술 작품, 저작물 등 예술적 활동의 결과물에 의한 개념의 정의. 말하자면 예술가는 예술(예술작품, 저작권물 등)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의미함.
-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의 사례가 있음.
- ⑤ 예술 활동의 특성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the nature of arts activity) : 예술가는 그 예술적 활동이 ‘비즈니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었을 때, 직업적인 것으로 간주됨.
- 문화예술인공제회와 관련하여 가장 근접하는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나 전개한 적이 있는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적 예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요청되며, 그 경우 다음 몇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음.

- ① 멤버십을 통한 정의 : ‘문화예술인공제회’ 가입 당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공공예술기관이나 민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단체나 협회 소속 예술인의 경우 기관이나 협회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회원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을 입증하는 방식.
 - 임의 단체로 조직되어 운영 중인 예술인 단체는 제외
- ② 예술적 산출물에 의한 정의 : ‘문화예술인공제회’ 가입 전 3년 동안의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하는 방식.
 - 세부적인 활동기준에 대해서는 장르별로 작성
- ③ 소득을 통한 정의 : ‘문화예술인공제회’ 가입 전 3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직업적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방식.
- ④ 자격심사위원회에 의한 정의 : ‘문화예술인공제회’에 회원 가입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제회에 가입 신청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심의하여 자격을 인준하도록 함.
 - 앞의 ①, ②, ③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문화예술인공제회’ 가입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자료의 판정이 애매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술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공제회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됨.

제3절 공제회의 주요 사업

1. 노후연금 관련 공제사업

가. 노후연금사업의 기본 방향

- 4대보험체계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별도의 연금체계의 구축은 논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 제도를 기본적인 연금제도로 전제한 위에 ‘문화예술인 공제회’의 내부 상품으로 ‘적립형 연금 상품’을 개발하여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 현재 문화예술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는 다음 네 가지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

(A) 특수직역연금 수혜자 그룹(교수/교사/공무원) : 특수직역연금 + 퇴직금(연금) + 개인연금
(B) 국민연금 수혜자 그룹1(급여를 받는 정규예술인) : 국민연금(직장) + 퇴직금(연금) + 개인연금
(C) 국민연금 수혜자 그룹2(자영예술인 중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지역) + 개인연금
(D) 무연금 그룹(자영예술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 : 국민연금 미가입 + 개인연금

-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를 전제로 (A)그룹과 (B)그룹은 노후에 3층 구조의 연금을 받게 되며, (C)그룹은 2층 구조의 연금을 받게 됨.
- (D)그룹은 이론상으로 ‘개인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연금도 미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연금에 관한 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그룹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계기로 문화예술인의 노후생

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성격의 ‘적립형 연금상품’을 개발·운영하되, 그와 병행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인공제회에서 ‘연금상품’을 운영하면, (D)그룹의 수는 최소화되고, 최소한 (C)그룹 정도의 연금수혜계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A)그룹과 (B)그룹은 타 직업집단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열등하지 않은 노후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C)그룹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문화예술인공제회 연금 상품)을 합하여 월 100만 원 정도 연금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

나. 가칭 ‘문화예술인연금’의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인공제회에서는 적금 형태의 연금 상품을 개발하여 가칭 ‘문화예술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인연금’의 가입자격은 문화예술인공제회에 가입한 모든 예술인으로 함.
- ‘문화예술인연금’의 운영 방안은 가장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설계하되, 구체적인 상품 설계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마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 공제’는 일종의 적금형 연금상품으로 일반 연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 상품 설계를 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인연금’ 연금급여 지급시 공적 재원에 의한 ‘장려금’ 지급이 부가된다면 공제회 회원에게는 최상의 연금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 공제’에는 부가적인 장려금

-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대신 퇴직연금에 ‘특별공로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문화예술인공제회에서는 적립형공제(가칭 문화예술인연금)에 공적 재원에 의한 장려금 지급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의 제도적 내용을 타 연금상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표 3-6>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와 타 연금상품 비교

구분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적립형 공제
소득공제	연간 300만	없음	없음
과세여부	연금소득세 5.5%	비과세(10년이상)	0 ~ 3.5%
납입기간	10년이상	7년이상	퇴직까지 (10년이상)
최소납입액	5만원	본인결정	5만원
연금수령 시기	45세~70세	45세 이후	55세~
중도해지	원리금의 22%공제 (원금손실가능)	해지환급금 (원금손실가능)	원금 + 이자차등지급 (원금보장)
해지가산세	있음	없음	없음
추가사항	특약보험	특약보험	공제회 복지서비스
사업비	보험료에서 차감	보험료에서 차감	별도예산사용

* 자료 :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sema.or.kr>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 공제’는 연금지급액에 있어서나 해지 환급금에 있어서 타 연금상품과 비교할 때도 수익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① 연금지급액의 비교

<표 3-7>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와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액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원금	일시금	연금지급액		
			1년차	20년차	합 계
공제회 (A)	120,000	224,195	11,209	30,419	383,381
연금보험(B)	120,000	198,054	15,287	15,287	305,740
차이(A-B)	0	26,140	-4,078	15,132	77,641

* 자료 :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sema.or.kr>

* 월 50만원 20년 납입, 20년 연금, 공제회 6% 연복리, K연금보험 5.2%연복리 적용 비교

* 이율 및 세율 변동 시 바뀔 수 있음.

② 해지환급금의 비교

<표 3-8>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와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원금	공제회(해지) (A)		보험(해지, 만기) (B)		차이 (A-B)
		지급금	지급율	지급금	지급율	
1년	6,000	6,058	101.0%	4,510	75.2%	1,548
5년	30,000	32,902	109.7%	31,724	105.8%	1,177
20년	120,000	224,195	186.8%	198,054	165.1%	26,140

* 자료 :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sema.or.kr>

* 월 50만원, 공제회 6% 연복리, K연금보험 5.2% 연복리 적용 비교, 이율 및 세율 변동 시 바뀔 수 있음.

* 공제회는 본인 의사에 의한 해지가 아닌 퇴직 시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6%연복리 계산금액 전액 지급

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미가입 예술인 (D)그룹을 (C)그룹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예

술인 노후생활보장의 실효성이 생김.

- 문화예술인공제회에 가입한 예술인의 경우 최소한 ‘국민연금’과 ‘문화예술인연금’의 이중의 연금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조금의 지급 방식은 정률제와 정액제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정액보조의 경우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보조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종의 누진효과가 발생하여 저소득 예술인의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예) 월 1인당 10,000~20,000원 정도의 정액 보조 형태를 적극 고려

○ 문화예술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보조 방안은 이미 시행중인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행 방안 마련.

○ 국민연금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의 보험료 일부를 공적 재원에서 보조하는 방안으로 그 수혜 대상 범위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함.

- 제1안 : 문화예술인공제회에 가입한 회원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전체(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 제2안 : 제1안의 대상자 중에서 지역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즉, 사업장 가입자를 제외하는 방안)
- 제2안을 시행하게 되면 의무가입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에서 이탈해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의 국민연금 체계 편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제1안을 시행하게 되면 영세한 예술단체나 기관을 사업장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만이 아니라 4대보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국고보조

-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시작.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특별세에서 지원함.

○ 지원대상

- ①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 ②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
- ③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후에 농어업인이 된 자

○ 지원금액

- 2008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620,000원(보험료 55,8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621,000원 이상의 경우 62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7,900원)을 정액 지원받음.
-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함.

기준소득금액별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액

(단위 : 원)

기준소득월액	22만원	23만원	24만원	25만원	26만원	27만원	29만원	31만원
지원액	9,900	10,350	10,800	11,250	11,700	12,150	13,050	13,950
기준소득월액	34만원	37만원	40만원	44만원	48만원	52만원	62만원 이상	
지원액	15,300	16,650	18,000	19,800	21,600	23,400	27,900	

-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함.

※ 예술단체 및 기관을 ‘사업장화’하는 방안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많은 예술인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연단체 등에서 예술인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공연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공연단체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4대보험 관련 사업자 부담분을 공적 재원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시행 방안 마련.

2. 상해 관련 공제사업

- 실연예술가의 경우 신체가 가장 중요한 직업 활동의 수단인 경우가 많으며, 예술활동 중 상해를 입어 상당기간 활동이 중지되거나 조기 은퇴를 해야 하는 사례가 많음.
- 그렇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공제사업을 통해 그 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타 공제회 등의 사업을 참조하여 개발하되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개발
 - 상해시 입원비 및 요양비 지원,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실시 등
 - 예술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특정 신체부위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관련하여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협약병원이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외에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사회보장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 의료비 지원 외에 소득 보전 대책 마련

3. 취업 및 재교육 지원 사업

- 자영예술인의 경우 현행 고용보험체계(실업급여, 재교육 등)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 문화예술인에 적합한 형태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보험체계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도록 함.
- 재교육 지원, 커리어 관리 컨설팅, 저작권 및 계약에 대한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조기 은퇴 후 직업 전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
- 관련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4. 생활자금 대여 서비스 사업

- 문화예술인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제 사업을 개발
 - 교육비(학자금) 용자나 자녀 장학금 제도(입학 축하금, 장학금 등) 운영
 - 주택 구입비 및 임대료에 대한 금융 지원
 - 경조사비 지원 또는 용자
 - 출산장려금 지원
 - 기타 생활금융 서비스를 타 공제회 수준으로 개발
- 재해 관련 지원(긴급구호 자금)
 - 작업실(스튜디오, 연습실, 공방 등)이 재난을 입은 경우 ‘긴급 구호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
- 영구임대아파트 제공, 예술인마을 조성 등 주택지원 방안도 검토

5. 여가·문화복지 서비스 사업

- 국민 여가·문화생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인이지만, 자신의 여가문화생활은 매우 취약한 형편에 있음.
- 그러나 예술인의 여가·문화생활은 새로운 예술문화 창조에 중요한 생산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함.
- 휴양 지원 프로그램
 - 휴양 및 관광지에 있는 호텔, 콘도, 펜션 이용에 가격 할인, 무료 이용 등 편의 제공, 교통 및 숙박 지원(철도, 항공료 할인 등)
 - 기업연수원, 타 연금공단이나 공제회 시설 공동 이용 방안 마련
 - 해외 여행 지원
- 문화생활, 여가생활 지원 프로그램

- 공연이나 전시, 문화상품의 구입에 대한 지원
- 스포츠 시설 등 신체훈련을 위한 시설 이용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공제회가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인에 맞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가칭 ‘문화예술인카드’를 개발하여 운영
 - 연간 20만 포인트 정도를 제공하여 문화, 여가 생활에 사용토록 함.
 -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근로자 문화·여가지원사업을 준용하여 개발

※ 근로복지공단의 저소득근로자 문화·여가지원사업

- 근로자여가지원사업 (근로자복지기본법 51조 7항에 근거)
 - 사업목적 :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 제공
 - 1994년 5월 시행
 - ① 이용대상 : 월평균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② 이용기간 : 3박 4일 이내
 - ③ 이용방법 :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콘도예약서비스에서 인터넷, 각 지사로 팩스, 우편 접수 → 공단에서 이용선정 → 선정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최근 3개월 임금대장을 팩스로 송부 → 월평균임금 170만 원 이하 자에 한하여 이용권을 이메일로 송부함
- 민간복지시설 이용지원사업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
 - 사업목적 : 저소득 근로자로 하여금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공 및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 일에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청구

- 예시) 헬스장에서 25만원 결제 → 카드대금 청구 일에 5만원 청구
(20만원은 공단에서 부담)

○ 이용대상시설

구분	이용대상
숙박시설	콘도, 펜션, 유스호스텔, 호텔, 민박, 기타 숙박시설
체육시설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각종 스포츠센터(스쿼시,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탄스 등), 각종 무술도장(태권도, 유도, 권투, 검도 등)
문화시설	전시장, 공연장, 영화관, 각종 박물관, 고궁, 기념관, 동·식물 전시장(아쿠아리움, 서울대공원 등), COEX, KINTEX 등 국제 전시장, 연극, 음악회, 미술관, 운동경기 관람장(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 지원자격 : 직전년도 말 3월 이전부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이고 월 평균 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면 가능.
- 업무처리 절차 : 사업계획 수립(본부) → 신청서 교부·접수(지사) → 선발신청(근로자) → 신청서 전산입력(지사) → 선발결과 확정·통보(본부) → Wellife카드발급(근로자, 카드사) → 해당 민간복지시설이용·결제(근로자) → 카드대금 청구일 에 50% 할인금액 청구(카드사, 근로자) → 카드사와 월 단위 정산(본부, 카드사)



제4절 재원 조달 방안 및 부담금 납부 방법

- 공제회는 자주적인 조직이므로 기본적으로 회원의 부담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공제회 설립 초기 가입 유도 및 임계규모(critical mass)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등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
-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대한 공적 재원의 투입은 문화예술인연금(적립형공제사업)의 급여 지급시 장려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 유사 공제회인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모두 공제회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표 3-9> 유사공제회 관련 법에서 정부보조금 관련 조항

법률명	정부 보조금 관련 조항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제12조 (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 (보조금지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한다.
군인 공제회법	제15조 (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경찰 공제회법	제17조 (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17조 (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②정부는 제1항 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교부할 수 있다.

- 공적 재원의 결합 수준에 따른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운영 시나리오
오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1안 :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회원의 부담금만으로 운영하는 방안(자주성은 강하나 재정 운영의 불안정이 예상됨)
 - 제2안 : 정부 출연으로 별도의 ‘문화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 수익으로 공제회의 문화예술인연금(적립형공제사업)의 연금 급여 지급시 장려금을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문화예술인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공제회 가입률을 높이고 문화예술인의 수혜도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제3안 : 일체의 공제사업은 회원의 부담금 및 공제회의 사업수익에 의존하되 공제회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문화예술인이 얻는 특별한 수혜는 없지만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이든 예술인 스스로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인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시 회비나 적립금을 사전 공제(控除)를 통해 원천징수할 수 있지만, 자영예술인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자발적 납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음.
 - 자발적 납부 형태로는 창구에서의 납부나 지로이용, 자동이체 등의 방법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취약한 징수구조라 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계좌를 개설한 후 CMS(cash management service)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이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부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이체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소득 발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자영예술가의 경우,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 납부 또는 선

택적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부담금 납부 방식 다변화를 고려해야 함.

- 개런티나 저작권료, 작품료 등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각예술의 경우 작품으로 대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료 등은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 미술품의 경우 다음의 APT 사례를 참고하여 현물 납부 방안 검토

Artist Pension Trust(APT)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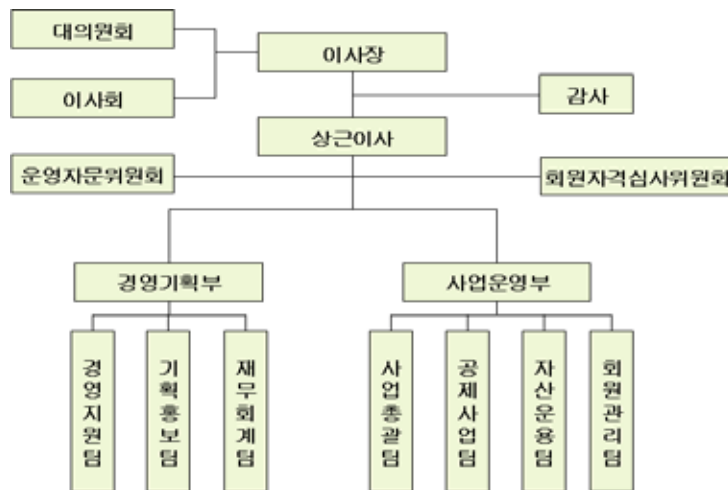
- APT의 개요
 - APT는 기업가 Moti Shniberg, 경제학자 Dan Galai에 의해 시작된 영리 기관으로 전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SFMOMA), 2002년 휘트니 뮤지엄 디렉터인 David A. Ross가 창립자임
 - 이 기관의 목적은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술가들에게 장기간의 재정 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음.
- APT의 혜택
 - APT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다음 혜택이 제공됨.
 - 최소 20년에 걸쳐 자신의 예술작품이 가진 가치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
 - 엄격하게 선정된 다른 249명(전체 회원은 250명)의 예술가들과 상업적 성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
 - 투자된 예술작품에 대한 높은 기준의 전문적 케어 제공
 - 선정된 전시를 위한 예술작품 대출의 용이
- APT의 운영 방법
 - APT는 장기투자전략 프로그램으로 20년간 20개의 작품을 제공
 - 예술작품이 팔릴 때, 각 예술가는 작품 판매 순이익금의 40%를 받게 됨.
 - 순이익금의 32%는 해당 APT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들의 공동 혜택으로 축적, 참여하는 각 예술가들이 다른 249명의 예술가들의 상업적 성공에 집합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순이익의 나머지 28%는 모든 경리와 비용 지출을 위해 APT에 의해 보유됨.

- 기여와 판매
 - 예술가는 APT가 그 작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자기 예술작품의 유일한 소유자임.
 - 예술가들은 다음의 스케줄에 의해 예술작품을 투자해야 함 : 처음 5년 동안 1년에 2 작품, 다음 5년 동안 1년에 1 작품, 그리고 나머지 10년 동안 2년에 1작품. 총 20년에 20개의 작품

제5절 공제회의 조직 구조와 법적 지위

1. 공제회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가. 공제회의 조직구조(안)



[그림 3-1] 문화예술인공제회 조직 구성도

- 공제회의 조직은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와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모든 의사결정은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하되 공제회의

대표성은 이사장에 있고, 실질적인 업무 총괄은 상임 이사가 담당하도록 함.

- 운영자문위원회와 별도로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나. 업무분장(안)

- 위의 조직구조에 맞추어 각 부서별 업무분장(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대의원회 : 대의원회는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전국 시·도별회원들로 구성된 대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원대표로 구성되며, 문화예술인공제회 정관의 변경,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이사장·이사·감사의 선출,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 이사회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공제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등 결정.
- 이사장 : 공제회를 대표하며 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임.
- 상근이사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내부 실무 업무의 실질적인 총괄 및 집행함.
- 감사 : 재무회계 부문의 금전적 업무처리의 사후 감사 및 조사 기능, 중요한 업무에 대한 정책적 감사 기능
- 운영자문위원회 : 공제회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자문하되 특히 ‘문화예술인연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급여 지급 기준, 상해/피

- 해의 사고 판정기준 등의 각종 기준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함.
- 회원자격심사위원회 : 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자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 신청자의 회원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
 - 경영기획부 : 내부적으로는 조직, 규정, 경영방침, 각종 업무의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대 정부관계 업무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협조, 홍보업무 등을 담당함.
 - 경영지원팀 : 조직 및 인사, 규정, 경영방침, 각종 업무의 총괄 조정업무 담당
 - 기획홍보팀 : 업무 추진전략, 정부관계 업무 및 대외기관과의 협조, 홍보업무 담당
 - 재무회계팀 : 재정부분 업무 담당, 예산, 회계, 계약 등 업무 담당
 - 사업운영부 : 공제회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추진, 자원 조성 및 자산 관리·운용을 담당하고 그 외 회원관리를 포함하여 업무를 담당함.
 - 사업총괄팀 :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행정적 필요 사항 지원하고 문화여가복지사업을 담당
 - 공제사업팀 : 공제회의 사업을 개발, 추진, 수행하는 팀으로서 ‘문화예술인연금’(적립형공제급여사업) 급여 지급 등 업무 담당
 - 자산운용팀 : 기금 및 자원 조성, 자산 운용 등의 업무 담당
 - 회원관리팀 : 회원 관리 및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담당

2. 공제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

- 공제회의 법적 지위는 법률적 설치 근거를 갖는 특별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특별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은 신법의 제정보다는 법률 개정이 용이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 문예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5항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그렇지만 고갈 위기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예술 창작 진흥이 아닌 문화예술인공제회에 사용하는 경우 예술계의 반발이 예상됨.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 제정을 통한 특별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은 법 제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별도로 예술인 복지 관련 기금(가칭 ‘문화예술인복지기금’) 마련에 유리하여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음.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의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목적, 법인격과 등기, 사무소, 정관,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조직, 대의원, 대의원회, 이사회,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사업, 자본금,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부칙 등

- 법안 초안의 세부적 내용은 부록 자료 참조.

제 4 장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계획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절 추진 과제 및 계획

1. 주요 추진 과제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의 제정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대한 문화예술계 의견수렴
 - 유사 조직과의 기능 조정
 -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가.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의 제정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 제정이라 할 수 있음.
 - 법의 제정은 문화예술인공제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뿐만 아니라 공적 재원의 조달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법 제정에 앞서 이번 기초연구보다 심화된 후속연구가 필요함.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공제사업 설계 및 재정 추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공제회 운영 방안 연구가 수행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임.
 -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의 법적 지위 및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어야 그 내용을 기반으로 법안 마련이 가능함.
- 법 제정의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일정 수준의 공적 재원 투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정부 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

는 것이 필요한 사안임.

- 일단 법을 제정한 이후 그에 근거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또 설립준비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단기간에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임.
- 반대로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문화예술인공제회’설립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나.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입법과정과 병행하여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위원회’ 또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조기에 법 제정이 가능한 경우 법 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위원회(또는 설립추진단)를 구성·운영하면서 설립 시까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문화예술계 및 공제회 운영 관련 전문가 15인 내외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5인 이내의 실무 전문가로 상설적인 사무국을 구성하여 설립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함.
 - 준비 업무에는 공제회 정관 및 제반 규정의 마련, 공제상품의 개발 및 설계, 회원 가입 추진 계획 등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전략의 마련 등이 있음.
- 법 제정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다. 공제상품의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

- 문화예술인공제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제회원이 적은 부담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생활 안정과 관련된 연금상품을 핵

심으로 하고, 거기에 다양한 생활보조 상품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상품의 설계 및 개발은 법 제정 이후 설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준비되어야 하지만, 그 시행은 공제회가 설립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함.
- 문화예술인연금에 부가적인 ‘장려금’의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적 재원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원 조달 방안 마련이 상품 개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기금’의 목표액 달성까지 국고에서 출연하는 방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복권기금, 토토적립금 등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규칙한 소득이 많은 문화예술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제회 회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부담금 납부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월정액 납부 방식 외에 일시납이나 현물납 등 다양한 방법 개발
- 공제회 운영경비(인건비, 경상비 등)의 안정적 마련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적 자원에서의 보조나 자체 사업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라.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및 홍보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성패는 그 핵심 주체인 문화예술인의 공제회에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공제회 설립의 제반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
- 이번 기초연구의 후속연구의 하나로 문화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복지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의 실시가 요구됨.
 - 이 조사는 향후 공제상품의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 법 제정시에도 기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반드시 개최하여 공제회에 대한 홍보 및 사업 내용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
 - 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문화예술인 복지를 담당하는 유사 조직이나 기관과의 관계 설정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함.
 -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 분야별 복지기관과의 기능 조정이 충분히 논의 속에 이루어져야 함.
 - 문화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인공제회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적극적 참여의지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 홍보 리플릿의 발간 등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2. 추진 일정(안)

-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과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주요 과제들이 적절한 흐름 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여기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가 국정과제로서의 채택되는 과정을 통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 추진 일정(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음.

<표 4-1>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 일정(안)

연도	주요 과제	내용
2008년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기초연구의 후속연구로 문화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문화예술인공제회 운영 방안 연구	기초연구의 후속연구로 공제회의 법적 지위 재정 추계 등 분석 연구
	문화예술인공제회 관련 전문가 세미나	문화예술인의 공제회 설립에 대한 인식 환기 및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연도	주요 과제	내용
2009년	문화예술인공제회법 제정	문화예술계 여론 수렴(공청회),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법률 제정
2010년	문화예술인공제회설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 제정 후 3월 이내에 구성하여 설립 준비 작업 추진
	문화예술인공제회 창립총회 및 법인 등록	공제회 창립후 회원 가입 및 자원 조달 방안 마련
	주요 공제상품의 개발 설계	문화예술인공제회설립위원회 및 공제회 사무국 주관하에 구체적 상품 개발설계 추진
2011년	‘문화예술인연금’(적립형 공제) 사업 시작	문화예술인공제회 대표적인 공제사업으로 추진
2012년 이후	추가적인 사업 개발 및 회원 가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생활금융 서비스, 상해 및 재해에 대한 지원, 문화·여가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공제 사업을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

- 만약 법률 제정이 늦추어지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예술계가 공동으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노력을 전개하고, 분위기가 조성되어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추진.

제2절 후속연구의 추진

- 이 연구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의 전체 과정 중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이 연구에서 이어서 추진될 과제로는 후속 연구가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을 위해서는 이 기초연구의 후속과제로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와 ‘문화예술인공제회 운영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론 후속 연구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면, ‘기초연구’를 활용하여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의 제정이나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1.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실시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인식 및 복지수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난 1997년부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인의 생활 실태 및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로서 가치가 있지만,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예술인의 복지욕구 조사, 특히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게 됨.

2) 연구 목적

- 이 조사는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8년 7월~11월(5개월)

- 조사대상 : 문화예술인 600명 내외
 - 문화예술인 모집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주요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장르별로 할당하여 조사
 - 각 할당 그룹 내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부분적으로 전화 조사 및 인터넷 조사 활용)
- 조사내용은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문화예술인의 복지욕구,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의견 등을 조사

<표 4-2>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조사내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가입 현황 • 노후대비 현황 • 기타 공제회 설립과 관련한 예술인 주요 복지실태 조사
문화예술인 복지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지원, 실업급여 지원 등 예술인의 전반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방안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회 인지도, 공제회 필요성 관련 의견조사 • 공제회 가입 대상 범위, 공제회 대상 자격 기준관련 의견조사 • 공제회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조사 • 공제회 부담금 부담 의지 • 공제회의 법적 성격, 공제회 운영 재원 조달 방안 • 기타 공제회 설립관련 필요한 의견 조사
응답자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고용형태, 문화예술계 종사경력, 활동분야(장르) 소득수준

다. 조사보고서 예상 목차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개요(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 규모 등)
3. 응답자 속성

제2장 문화예술인 복지 실태 및 수요

1.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2. 문화예술인 복지수요

제3장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대한 인식

1. 문화예술인공제회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문화예술인공제회 사업 내용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의지
3. 문화예술인공제회 재원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부록 설문조사지 및 교차분석표

2. 문화예술인공제회 운영방안 연구

- 이번 ‘기초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가까운 시일 내 ‘문화예술인 공제회 운영방안 연구’가 필요함.
 - 구체적인 설립 계획 연구이므로 공제회의 명칭을 ‘예술인공제회’로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실제 공제회 운영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내용 및 재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제회 가입 대상의 범주 및 기준 확정
- 가입률 및 가입자 수 예측
- 회원 부담금 규모의 산정 및 가칭 ‘문화예술인연금’ 급여 구조의 제시
- 설립 후 30년 정도까지의 재정 추계 및 현금 흐름의 제시
- 공적 재원(국고, 복권기금, 문예진흥기금 등) 부담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 수익사업 운영 방안
-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 5 장 결 론

- 최근 수년 동안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였으나 그 구체적 설립 방안이나 공제회에서 운영할 사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음.
 - 이 번 연구는 국정과제인 문화예술인공제회의 밑그림을 처음으로 가시화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이번 연구 결과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를 특별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음.
 - 가입 대상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장르에서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관련 스태프(행정, 경영, 기술 스태프)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적 예술인’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인공제회의 잠재 회원은 대략 10만 명 내외로 추정됨.
 - 그 대상 범위로 보아 공제회의 명칭도 가칭 ‘예술인공제회’가 적절할 것으로 제안함.
- 이후 추진 과정에서는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의 제정과 공적 재원의 출연이 가장 핵심적인 해결과제로 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인의 실질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의견 수렴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다만 현재와 같은 경제 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한 단기적으로는 공적 재원 투입에 의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관련 기금에 의 정부 출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 건설근로자공제회(2008),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주요내용 및 EDI
사용방법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연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7),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방안□□
-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0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김달진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7),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 김진선 외(200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보험개발원 보
험연구소.
- 문화체육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1997□□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0),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0□□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3□□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6□□
- 박영정(2006),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
구원.
- 설성수(2001), □□정부출연(연) 연구자의 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규범(2005),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
보험료 확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규석(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
터·문화관광부.

전무무용수지원센터(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2007□□

정갑영(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

IFACCA(2002), “Defining Artists for Tax and Benefit Purposes”.

Joyce Zemans(2007), “Policies and Programs of Support for
Senior Artists”, IFACCA.

UNESCO(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http://unesdoc.unesco.org/images/0011/001114/111428mo.pdf>)

CANADA(1992), Status of the Artist Act
(<http://laws.justice.gc.ca/en/s-19.6/text.html>)

건설근로자공제회, <http://www.kcwmf.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군인공제회, <http://www.mmaa.or.kr>

과학기술인공제회, <http://www.sema.or.kr>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Artist Pension Trust, <http://www.aptglobal.org>

ABSTRACT

A Basic Study on Korea Artist Mutual Aid Association

Park, Young-jeong

There are more than a few artists living in poor and miserable conditions, unable to make a living solely through their artistic activities. To make matters worse, they are denied access to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nd employment insurance, thus being driven further into an uncertain future.

In order to improve the artists' living conditions, the government is making an effort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entatively named the Korea Artist Mutual Aid Association(KAMAA), one of the national agenda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needs for its founding, eligibility for membership, its fundamental operational concepts, and the specific processes of its establishment before the government addresses the projec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make out a draft of the KAMAA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has come to the temporary conclusion that it will be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KAMAA as a special corpor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eligibility for membership

in the KAMAA be limited to professional artists working in artistic fields such as literature, fine arts, photography, architecture, theater, music, dance,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When the project is implemented, the most pressing needs will be the enactment of a relevant law, tentatively named the Act on the Korea Artist Mutual Aid Association, and securing the required public financial resources. Furthermore, it will be of vital importance to coordinate opinions from the artistic community in order to ensure that artists actively take part in the KAMAA.

However, if economic conditions continue deteriorating, it will not be easy for government to fund the KAMAA with public financial resources in the short term.

부 록

가칭 문화예술인공제회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문화예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과 등기) 문화예술인공제회(Korea Artist Mutual Aid Association, 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사무소)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문화예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입 현재 국가공인 예술기관 및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2.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관련 수입이 있는 자
 4. 그 밖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 ③ 제1항 각호의 구체적 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제6조의 회원 자격 심사를 다루기 위하여 공제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 (대의원)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 4. 결산의 승인
 -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 등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 4. 공제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그 밖의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10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제15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를 제외한다)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원으로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 (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4.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 (자본금)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제1항 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5조 (행정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6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15인 이내

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공제회의 설립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저자약력

연구책임

박 영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인 송 재 호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08년 6월

발 행 일 2008년 6월

인 쇄 처 크리홍보(주)

ISBN : 978-89-6035-104-2 93300